

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년 4월 18일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1월 17일

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월 20일

라. 상정일자: 제2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3. 4. 18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기획예산과장 조은영)

☐ 제안이유

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구성 인원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확대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함

☐ 주요내용

가.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인원 현실화 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3조

2)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2.12.20. ~ 2023.1.10.) 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장석현)

가. 개정 취지

- 규제개혁위원회 당연직, 위촉직 위원 구성 인원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확대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함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3조제1항 중 “12인 이내의 위원으로” 를 “21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” 로 수정함

다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,
-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을 ‘12인 이내’에서 ‘21인 이내’로 확대하고,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특정 성별의 의견에 편중되지 않는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구성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□ 행정규제기본법

제3조(적용 범위)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 5. 29., 2017. 11. 28., 2022. 1. 4.>

1.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
2. 형사(刑事), 행형(行刑)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
- 2의2. 과징금,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
3. 「국가정보원법」에 따른 정보·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
4. 「병역법」, 「통합방위법」, 「예비군법」, 「민방위기본법」,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및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규정된 징집·소집·동원·훈련에 관한 사항
5. 군사시설,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
6. 조세(租稅)의 종목·세율·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

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·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(公表),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, 기존규제의 정비,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□ 양성평등기본법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0. 5. 19.>

1. 국가 및 시·도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실무위원회
2. 시·군·구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시·도위원회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